

“가해자 연대 그자체... 유족 등 참여 독립조사기구 설치해야”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 보고회

박홍근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 정부여당 애초부터 진정성 없어” 특별법 통해 독립 상설기구 설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한목소리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유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3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18일 “지금부터 국회의 도전이 시작됐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가지며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절규를 묵도하면서 초기일관 ‘방탄’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가 재난 관리 주무 기관임에도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위증했지만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시간 끄는 탓에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과보고서 채택마저 반쪽으로 만든 것은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다. 가해자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

는 견고한 시민 연대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1월 임시회 내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국조특위의 성과에 대해 “어렵게 추진된 국정조사인 만큼 성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책임질 일 없다는 변명이 싹 사라졌다”면서도 “2차 가해행위

도 공적 영역에선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없으니 유가족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은 우리 지식에게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물쩍 넘어간 진상규명에 대해서 재난 안전 시스템과 매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석과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

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을 두고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에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신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조차 해낼 수 없는 나라로 무너져 가고 있다”며 “제대로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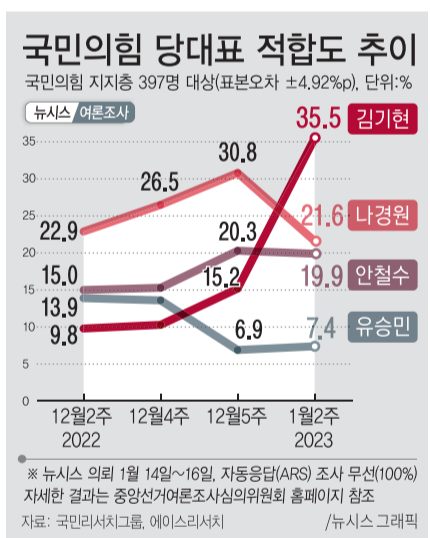
국조특위 종료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고 조사를 하지만 장차 상설적으로 하지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인력, 예산, 공간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논의를 여야가 착수해야 한다. 이 조사기구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의 문턱까지 제기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심’ 힘 얻은 김기현, 36.5%로 與 당심 1위 올라

與 지지층 당대표 지지율 조사 나경원 21.6%, 안철수 19.9% 결선투표, 당권 확보 변수 전망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김 의원에게 향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친윤(親尹석열)계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으며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스1 의뢰로 조사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 (1월 14~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39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35.5%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경원 전 의원(21.6%), 안철수 의원(19.9%), 유승민 전 의원(7.4%), 황교안 전 대표(3.7%), 조경태

의원(2.5%), 윤상현 의원(1.5%) 순이었다.

직전 조사(2022년 12월 27~29일)에서 김 의원 지지율은 15.2%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 20.3%포인트 오른 수치다.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해 이번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게 됐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씨치가 뉴스1 의뢰로 실시한 조사(1월 15~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43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김 의원은 35.0%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23.3%), 안 의원(18.0%), 유 전 의원(8%), 윤 의원(1.2%)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은 12월 2주

차 1차 조사 당시 지지율 9.8%를 기록했다. 이후 10.3%(12월 4주차)→15.2%(12월 5주차)→35.5%(1월 2주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같은 기간 22.9%→26.5%→30.8%→21.6% 지지율을 기록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 하락 시점이 대통령실·친윤계 갈등이 부각된 직후로 분석되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김 의원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 구축 이후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상 윤심으로 당심까지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가 김 의원 상승세가 당권 확보로 이어지는 데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인 나 전 의원, 안 의원과 일대일 대결 구도로 정리되면, 나머지 주자들 표심이 어디로 향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는 꾸준히 비윤(非尹석열)인 유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포함된다.

즉, 김 의원에게 ‘윤심’을 넘어 ‘확장심’이 없으면 당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 의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너무 우왕좌왕한다든지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반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를 고려한 듯 같은 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을 언급한 뒤 “(다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그동안 정치 역점을 보며 저하고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져오셨던 분이기에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하는 뉘앙스로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李, 檢 2차 소환통보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오라니, 가겠다”

“주중엔 일해야하니 28일 토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30일 이틀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따른 출석 일정과 관련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에 일반 형사 사건도 처리 못 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하겠다.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다”며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소환 통보 조사를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

기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산 LCT 개발 특혜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에 대해 언급한 뒤 “민간에 개발 허가해 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럼 배임죄냐”고 성토했기도 했다.

이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발 이익 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영훈 기자